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29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4.

발 의 자 : 고동진 · 박덕흠 · 강승규
송언석 · 서명옥 · 서일준
주호영 · 박충권 · 김소희
조경태 · 박성훈 · 성일종
강대식 · 강선영 의원
(14인)

제안이유

유튜브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하고 가짜뉴스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음.

한편 유튜브,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,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‘입법적 기능 미달’로 유튜브상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,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(가짜뉴스)의 유통을 예방, 삭제 및 제한하기 위

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,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,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규정 제정·공표의 대상에 기존의 명예훼손 사항 외에도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(가짜뉴스 등)를 추가함(안 제21조제4호 신설, 제24조제2호).
- 나.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(가짜뉴스 등)와 명예훼손 등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).
- 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,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, 이

경우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함(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).

라.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통하여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(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).

마.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하는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,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따르지 않거나,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30조제1항 신설).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

따른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한 심의

제24조제2호 중 “제21조제3호 및 제4호”를 “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제2호 중 “제한”을 “제한과 해당 정보의 삭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

따른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제한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 특례 등) ① 위원

회는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

따른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,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

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내

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.

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의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심의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~ 9. (생 략)	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 <u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<u>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 한 심의</u> 5. ~ 10. (현행 제4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)
제24조(심의규정의 제정 · 공표 등)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 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 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 · 공표한다. 1. (생 략) 2. <u>제21조제3호 및 제4호</u> 를 심 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	제24조(심의규정의 제정 · 공표 등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</u> - ----- -----
제25조(제재조치 등) ① 심의위원 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 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	제25조(제재조치 등) ① ----- ----- -----

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
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.

1. (생략)
2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
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·정
지 또는 제한

<신설>

② ~ ⑦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----제한과 해당 정보의 삭제

3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
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
한 삭제 또는 제한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5조의2(정보통신서비스 제공
자에 대한 제재조치 특례 등)

① 위원회는 국내외의 정보통
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21조제
3호 및 제4호에 따른 불법 및
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, 삭제
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
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
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내외
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
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

제30조(과태료) <신 설>

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
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.

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의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0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
③ 제1항 및 제2항-----

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	----- --.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